

## 중년기 직업종사자의 은퇴 후를 대비한 재정적 준비: 공적 연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 인 숙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 A Study on Middle-Aged Jobholders' Financial Planning for After-Retirement Period :

Focused on the Differences Among the Members of Participated Public Planned Pension Types

Kim, In Sook

School of Liberal Arts, Seowon University, Cheongju, Korea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middle-aged jobholders anticipate their living after retirement, how they plan their post-retirement financial welfare and what attitude they have towards old age. The data came from 290 middle-aged male and female people in Incheon, Suwon and Cheongju city and were analyzed to find the differences among public planned pension type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System (NPS),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Corporation (GEPC), and the Korea Teachers Pension (KTP).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xpected income level after retirement in GEPC members was the highest and the lowest in KTP members. Second, the expected living period after retirement is the main criteria used when determining the amount of money needed for old age. Third, KTP members were of the most inferior at financial planning and practice, especially self-reflection of their expending behavior, thrift and saving practice for old age.

Key words: financial welfare, middle-aged jobholder, after-retirement, old age, public pension system

#### I. 서론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증가는 사회적으로 커다

란 이슈로 대두되었다. 종전에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노인의 건강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전통적으로도 자녀의 부모봉양이 도리로 여겨졌으므로 노

이 논문은 2004년도 서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 2006년 7월 28일 채택일: 2006년 9월 13일

Corresponding Author: Kim, In Sook Tel: 043-299-8309

E-mail: kisook@seowon.ac.kr

인의 노후 생활 대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부모노인을 부양할 자녀 세대들의 가치관과 생활 모습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급기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짐으로써 국가적 위기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현상은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노인의 부양을 책임질 젊은 세대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중국에는 국가 자체가 파산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게 된다.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 1명의 연금을 위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인력은 4~5명 정도이며, 미국의 경우 2030년이 되면 이 같은 노동인력은 3명으로 줄어들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 1명의 생계를 부담해야 할 노동인구가 2.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일 2001; 양순미 등 2002 재인용). 이러한 추세는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2050년이 되면 노인 부양률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KBS 2004.10.26).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서로 앞 다투서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제언일 뿐, 개인에게 적합한 은퇴 후 소득수준은 개인이 처한 환경 또는 삶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은퇴 후 대비책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개인 자신이 처한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Canada 2001).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은퇴 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두 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 중 공적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ystem :NPS), 공무원 연금(Government Employee Pension Corporation :GEPC), 사학 연금(Korea Teachers Pension :KTP)과 군인 연금이 해당된다. 이들 공적 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연금 유형이나 가입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강제 보험이면서, 해당 특정 직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연금 유형 간에는 상호교류나 호환성이 없으며, 다만 한 연금유형에 가입해 있다가 그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연금유형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각 연금 유형별로 은퇴연령이나 일하는 기간동안 적립하는 기여금액과 연금 수령금액 수준도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런 공적연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적연금, 즉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각 개인이 임의대로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어서 가입자의 형편에 맞게 가입여부 및 가입조건들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공적연금 가입자들은 기금운영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국가를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거부운동까지 벌여지기도 하였다(www.antinpc.com;antinpc.liso.net). 그리하여 국민연금은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지금처럼 내고 아주 많이 덜 받는' 형태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배준호 등 2005). 또한 최근에는 46년간 유지되어 오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발표가 나왔고, 기금 운용을 잘못된 정부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 몰으려 한다면서 반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매일경제 2006. 7. 7).

그러나 현재의 연금제도는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당장의 연금 수혜자들은 자신의 기여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지만,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될 것이므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주장들에서는 제도 개선에 앞서 연금 목표부터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오래 사는데 따르는 위험, 이른바 '장생(長生)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부 역할은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합당하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은퇴 후 소득을 은퇴 전 소득수준과 대비한 소득 대체율에서 평균소득 대비 60%나 되어 미국, 캐나다, 영국의 40%나 복지친국인 프랑스의 50%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우리 연금제도에는 체면유지 비용까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매일경제 2006.6.28). 그러는 한편에서는, 국민, 공무원, 사학, 그리고 군인 등 4대 공적연금의 65세 이상 노인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72만 7천여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3년 사이 92%나 증가한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08년께는 노인 수급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서울경제 2006.6.26)는 보도도 있었다.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는 그 취지와는 별개로 제도 자체가 지니는 문제점들로 인해서 불안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가입자들은 갈팡질팡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각각의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든지 아니면 국가가 최저생활만을 보장해 주는 정도로 제도변경이 있든 간에 중년기 직장종사자들은 은퇴 후에 공적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별도의 재정적인 대비를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노후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캐나다의 연금제도에 대한 홍보자료(2001)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퇴 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가족들과 더불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하며, 각종 여가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윤통성 있는 생활을 꿈꾼다. 그러나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은퇴 후 소득원에 대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략) 당신이 은퇴한 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계획을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절대로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의 공적연금 제도는 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을 완전하게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사회 전반적 인식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적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중년기 직업종사자들이 은퇴 후의 생활을 어떻게 예상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태도가 어떤지 공적연금 유형 가입자별로 그 차이를 비교해 보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지금까지는 개별 가계 차원에서 중년기가 은퇴 후 또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그들의 은퇴 후 재정적 준비에 어떤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공적연금 가입자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써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은퇴의 개념과 관련 연구 고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꾸리다가 어느 시점에 그 일에서 물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행위를 ‘퇴직’이라고 하고, 이후 그 사람을 퇴직자 또는 퇴직 생활자라고 부른다. 표준국어 대사전(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남”이라고 정의되고, ‘퇴직’과 유사어로서 ‘은퇴’라는 단어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퇴직’과 ‘은퇴’는 하던 일에서 물러난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의미를 지니지만, ‘퇴직’은 다시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은퇴’는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더 이상의 다른 할 일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가운데에서는 각 연구마다 특별한 기준없이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예를 들면 이승아 등(1998)은 퇴직을 일반적으로 유급의 직업적 지위와 역할에서 물러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는 전환점, 즉 모든 직업적 경력의 종단을 의미한다고 하여 ‘은퇴’의 개념을 표현하였고, 김연옥(1992)은 ‘퇴직’을 고용에 의한 유급의 직위에서 물러나 이 직위와 관련된 역할수행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은퇴’개념을 적용하여 이후 ‘은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며, 다만 인용문헌에서 ‘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볼 수 있었다. 하나는 은퇴 후 가구를 노인가계로 보고 노인 가계를 대상으로 경제

적 상태를 분석한 연구(양세정 등 2001; 이희숙 1995), 다시 취업노인 가계와 비취업 노인가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김연정 1998; 정순희 등 2002), 그리고 비노인 가계와의 재정 상태를 비교분석한 연구(김순미 1997; 문숙재 등 1996)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은퇴 후를 대비한 여러 준비영역 중 경제적 준비를 한 영역으로 포함시켜 다른 연구(강유진 2005; 김기태 2003; 김미혜 1993a, 1993b; 김혜연 2002; 배문조 등 2004; 손선경 등 1985; 양순미 등 2002; 이승아 등 1998; 이희경 2003; 최보아 등 2004) 홍성희·곽인숙 2006; 홍성희 등 2006)와 은퇴를 대비한 가계에서의 경제적 준비에 관한 연구(김미경 1992; 김성숙 등 1992; 김순미 등 1994; 김인숙 1992; 서병우 2001; 이지은 2000; 장민자 2003), 그리고 퇴직자 가정의 생활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경제 만족도를 변수로 포함시켜 다른 연구(성미애·옥선화 2002)가 있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은퇴 후를 대비한 준비계획을 다른 연구만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강유진(2005)은 노후준비 영역을 경제적 준비,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김기태(2003)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준비영역으로, 그리고 양순미 등(2002)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여가 준비영역으로 나누었다. 먼저 30대 이후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강유진(2005)은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준비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경제적 준비이며, 경제적 노후준비를 많이 하는 집단은 연령이 많고 경제상태가 좋고, 이런 결과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같은 결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김기태(2003)는 노후 생활 준비의 우선순위는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의 순이며, 이중 경제적 준비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잘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년기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순미 등(2002)에서는 강유진(2005)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준비가 신체적 준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궁핍은 비단 경제적 측

면뿐만 아니라 의료관리 부족, 양양섭취 미흡, 여가생활 불능, 자존감 하락 등 생활의 다른 영역들에까지 부정적 결과를 파생시키므로(이인수 2002), 노후에 경제력을 갖춘다면 건강유지와 적극적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심리적, 정서적 만족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대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도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배계희(1988)와 도시의 초기노인을 대상으로 한 황승일(2000)에서는 노후준비 중 경제적 준비가 정서적, 신체적 준비보다도 가장 낮았다(강유진 2005 재인용).

이러한 은퇴 이후의 경제적 준비에 관해서는 자신의 현재 연령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대책을 세우는 목적은 여유 있고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노후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이지은 2000),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소득과 여가의 필요성 인식 순이라고 하였다(배문조 등 2004).

또한 김은정(1993)은 노후대비 재정계획이 당면과제라고 인식한 사람이 전체의 90%를 차지해서 노후준비에 대한 목표설정 정도는 높았으나, 노후준비를 위해 실제로 자신의 자원을 평가한 사람은 전체의 40%에 불과해 아직도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배문조 등 2004 재인용), 최가영 등(2001)은 퇴직 후 만족스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는 그들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안정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나타내는 은퇴예상 연령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수입은 은퇴 후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은퇴와 관련된 연구에서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질적인 수입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입의 규모가 생활에 적정하리라는 인식이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수입의 안정성은 퇴직생활의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퇴직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김미혜 1993b),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김미혜 1993a), 배문조 등(2004)은 소득이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노년기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준비자금을 확보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최근 농림부(2006)에서 1955~1963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월평균(예상) 지출액은 '100만원이상~200만원 미만'이 47.9%로 가장 높게 나왔고, '200만원이상~300만원 미만'이 31.6%였다(매일경제, 2006.7.13일자). 또한 오종윤(2005)은 "지금 40세 남자가 60세에 은퇴한다면 90세에 죽을 때까지 1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제경 박사는 노후는 젊어서 대비할수록 좋다고 하면서 현재의 연령대별로 노후에 월 지출회망 금액을 쓰기 위해서는 매달 저축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를 제시(연합뉴스 2006.5.31일자)하고 있다. 또한 노인철(2004)은 노년기 예상 생활자금 규모를 동갑내기 부부가 60세에 은퇴하고 80세까지 20년 동안 함께 생존할 경우를 가정하여 예상 노년 생활자금을 약 2억 3천만원 내지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한다(강유진 2005 재인용). 이처럼 다양한 노후 생활자금 규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생활표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수입(세금공제 전)의 70%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Canada 2001).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의 수입은 퇴직 전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 내지는 약 60%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연옥 1992).

그런데 김혜연(2002)은 중년기 근로자 중에는 은퇴 후 수입원으로 연금을 꼽는 비율이 가장 많다고 하였으며, 김미경(1992)은 노후 준비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2.2%이고, 금액은 매월 5-10만원씩이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노후 준비계획을 하는 사람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축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김성숙 등(1992)은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준비 월평균 저축액이 10만원 미만이 과반수이상이었으며, 5만원 미만도 25%여서 적은

액을 노후준비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주된 노후 준비방법은 금융저축, 보험, 부동산, 퇴직금, 연금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스스로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족한 문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사회적 해결책으로는 '연금제도'와 '퇴직 후 경제활동 보장' '노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퇴직정년의 연장, 의료보호 등을 꼽았다. 그런데 심영 등(1996)이 충북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9.6%의 노인가구에서만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매우 적은 수의 노인가구만이 연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미석(2005)은 60세 이상의 42.8%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들 중 29.6%가 공적·사적 연금을 준비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체 응답자의 약 12.7% 정도에 불과하여 그다지 높은 비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순미 등(1994)은 은퇴를 계획한 집단의 소득이 비계획 집단의 소득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역시 은퇴 계획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홍성희 등(2006)은 남녀 봉급생활자들의 은퇴 후 생활계획에 대한 비교 결과, 남성과 여성 간에 경제적 준비수준 및 경제적 능력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민자(2003)는 청장년층의 67.4%가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61.5%의 응답자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령, 자녀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배문조 등(2004)에서는 그동안 국내의 은퇴와 관련한 연구들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여성의 역할도 교육수준의 향상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이제 은퇴의 문제는 점차 여성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은퇴 후 생활의 질은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은퇴 후 삶의 질적인 보장은 재정적 안정을 기초로 담보될 수 있다. 김연옥(1992)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준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 후 남자노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

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일찍부터 경제적 준비를 계획하여 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에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양순미 등 2002). 따라서 퇴직에 대한 준비는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김미혜 1993).

이상 살펴본 문헌들에서는 미리 은퇴 후를 대비하는 행동은 은퇴 후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한 재정경제적 준비와 관련되는 변수로 성별, 현재 나이와 은퇴예상 나이, 자녀수, 월 소득, 노후소득이 적정하리라는 인식, 그리고 목표 준비금액 수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성숙 등(1992)에서 스스로의 노후대비가 미흡할 경우 그 해결책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금 제도'를 꼽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년기 직장인들의 노후 생활에 안정적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각 공적연금 유형에의 가입자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가입자들의 개별적인 재정경제적 준비상황 및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성별, 은퇴연령을 비롯한 은퇴 시기 관련 변수 및 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 관련변수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 2.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은퇴에 의해 예견되는 문제는 개인에 따라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겠으나 수입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은퇴는 은퇴자의 경제상황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 따라서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는 각 국가마다 주요한 경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는 실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은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데(최혜지 등 2005),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노인들은 소득의 93%를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해 왔다(최성재 등 2000). 그러나 이제

는 국가적 관심에 의해 공적이전소득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적연금 제도는 현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사학 교직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직역연금인 공무원 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가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군인연금 제도를 제외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4u.or.kr](http://www.nps4u.or.kr)), 공무원연금공단([www.gepco.or.kr](http://www.gepco.or.kr)),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http://www.ktpf.or.kr))를 통하여 각각의 연금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 1)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는 일상적인 생계활동으로 여유가 없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대비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보장제도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정해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

가입요건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88년 1월 처음 시행될 때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실시되다가 '92년 1월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95년 7월에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확대 시행되었고, '99년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있고, 소득과약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명실상부한 국민연금으로 정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 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는데, 40년 가입 기준 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

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 급여 중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0세가 되면 본인의 청구로 지급되게 된다. 다만, 현재 연금 수령연령은 만 60세이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다. 이는 갈수록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제도가 안정되지 못한 제도라는 하나의 반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과 약 수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가입자인 봉급생활자의 불만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와 같은 부담제도에서의 잘못과 부실운영 문제는 자칫 국가에게 커다란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엄규숙 2003) 있는데, 이는 많은 영업비용을 지출하고도 회사의 이익을 남긴 후 가입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민간의 금융상품과는 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분석 때문이다.

## 2)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는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이후, 1960년 1월1일에 공무원 연금법의 제정·공포로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권의 교체에도 흔들림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된다.

공무원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수급을 위한 비용부담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와 연금수혜자에게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비용부담 방식인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매달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보험료)으로 납부하고 있고, 사용자의 보험료로 국가가 8.5%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 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보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인 부과방식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정부는 기업주가 민간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며, 부담률이 현실화된 현재에도 정부는 연금 부담금으로 보수 예산의 8.5%와 퇴직수당 부담금 약 3.5%를 합하여 12%(연금산정기준보수가 총보수의 70% 정도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8.4%)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기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 4.5% 이외 퇴직금 총당금 8.3%, 고용보험료 1.1%등을 합하여 약 14%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위한 정부의 추가부담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의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서 독일은 연금비용의 전액(보수예산의 41% 수준), 프랑스는 공무원 부담(7.85%)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보수의 52% 수준)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 공무원 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했는가와 여부에 따라 다른 계산방식이 적용되게 되는데, 퇴직 당시의 평균 보수월액과 연금선택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되고, 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 계산방식은 재직기간이 20년인 경우 평균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총액은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사학연금 제도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1일 출범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은 공무원 연금제도와 동일하다. 이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 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금 적용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 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한 정규 교직원에게 당연 적용되고, 사립학교 중 유치원, 각종 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도 소속기관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정을 받으면 임의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직원의 범위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임명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동 법의 정관 상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하며, 임시로 임명된 자나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된다.

퇴직 급여액은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을 기초로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퇴직연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 보수월액의 50~70% 상당액을 교직원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며, 연금액은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연동된다.

### 4) 개인연금제도

앞서 소개한 국민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와 사학연금제도는 비영리 기관 및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공적연금이 강제적 성격을 띠는 반면에 개인연금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원할 경우 임의대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이다. 여기

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양자택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공적연금으로 부족할 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사적 연금으로 보충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공적연금에의 가입은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집단구분 변수로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은퇴시기에 대한 견해는 각 공적연금의 가입자별로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 : 현재 경제생활 실태는 각 공적연금의 가입자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와 목표준비 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각 공적연금의 가입자별로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4: 노후 준비에 임하는 태도는 각 공적연금의 가입자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5년 12월 20일까지 수도권지역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수원시, 그리고 충북 지역의 청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된 자료 중 부실 기재자분을 제외한 총 29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았고, 응답자 본인의 직업은 공무원이 39.3%로 가장 많고, 다음이 회사원, 자영업, 교수, 교직원, 교사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5.2%였다. 응답자의 나이는 40대 이상이 75.6%였고, 거주지



역은 시 단위가 76.5%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가 가입한 연금유형은 공무원 연금이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국민연금 42.4%, 그리고 사학연금에는 11.4%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금제도 가입기간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18.7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이 사학연금 15.8년, 국민연금 11.6년의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부양 가족수는 3.4명이고, 그들이 은퇴 시 예상 가족수는 2.5명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각 연금제도별로 응답자들의 세부직업을 보면, 공무원 연금에는 공무원(109명)과 국립대학 교수(5명),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9명) 및 교직원(5명)이 해당되고, 사학연금에는 사립대학 교수(21명), 사립 초·중등학교 교사(2명) 및 교직원(16명)이 해당된다. 국민연금에는 회사원(39명)과 자영업자(36명), 그리고 기타 직업인(5명)이 해당되고 있다.

### 3. 측정도구

본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에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 은퇴 및 은퇴 준비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 그리고 노후준비 태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은퇴 및 은퇴 준비에 관한 문항은 캐나다의 은퇴 및 연금 실태 조사표(연도미상)에서 사용한 문항을 주로 참고하였고, 노후준비 태도에 관한 척도는 김인숙(1992)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적극 찬성'을 5점으로 하고 '적극 반대'를 1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노후 준비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가 0.63이었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Gender	Male	167(57.8)	Public officer	114(39.3)	
	Female	122(42.2)		Professor	26(9.0)
	Total	289(100.0)		Teacher	11(3.8)
Age	Below 40	70(24.5)	Self occupation	School officer	15(5.2)
	41~45	60(21.0)		Office man	43(14.8)
	46~50	92(32.2)		Self- employed	40(13.8)
	Over 50	64(22.4)		Others	41(14.1)
	Total	286(100.0)		Total	290(100.0)
Residence area	Megalopolice	54(18.8)	Spouse occupation	Public officer	24(8.3)
	City	220(76.4)		School- related	23(7.9)
	Gun	14(4.9)		Office man	45(15.5)
	Total	284(100.0)		Self- employed	68(23.4)
No. of dependentsM (SD)	Present	3.37(1.1)	Nothing	130(44.8)	
	Retiring	2.50(1.1)	Total	290(100.0)	
Participating public pension system	NPS	123(42.4)	Participation period(yr.) M(SD)	NPS	11.6(5.9)
	GEPC	128(44.1)		GEPC	18.7(8.9)
	KTP	39(11.4)		KTP	15.8(6.9)
	Total	290(100.0)		Average	15.6(8.2)

계산하였으며, 조사 대상자가 가입한 공적연금을 집단구분 변수로 하여 각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빈도와  $\chi^2$  검증 및 분산분석과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목표 준비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후 준비 태도 척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한 분산분석과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가입한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정도와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집단 구분을 위한 변수로 사용하는 공적연금 유형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세 가지이다. Table 2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정도를 알아보았는데, ‘불안하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고, ‘믿을 만하다’는 응답은 35.9%여서 공적연금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는 불안하다는 응답율이 61.5%로 가장 많았으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서는 믿을 만하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점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가입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정도와 현재생활에의 만족도를 Table 3에서 알아보았는데, 공적연금 제도를 신뢰하는 집단에서는 현재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응답율이 상당히 높았

고, 신뢰도가 낮은 집단에서 현재생활에 불만족하는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어서 공적연금제도에의 신뢰 정도는 가입자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reliability of participated public pension system and the present living satisfaction N(%)

Pension	Present living			Total
	Reliable	Unaware	Uncertain	
Satisfied	68(70.1)	22(52.4)	63(48.8)	153(57.1)
So-so	22(22.7)	15(35.7)	48(37.2)	85(31.7)
Unsatisfied	7(7.2)	5(11.9)	18(14.0)	30(11.2)
Total	97(100.0)	42(100.0)	129(100.0)	268(100.0)
$\chi^2$ - value	$\chi^2 = 10.783^*$		df=4	

\* p<0.05

#### 2. 은퇴시기와 관련한 사항

Table 4에서 공적연금별로 가입자의 현재 나이를 알아본 결과, 사학연금 가입자가 전체 평균보다 많은 48세였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이보다 약 3살 적은 45세 정도였다. 본인이 예상하는 은퇴나이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62.3세로 가장 많고, 공무원연금 가입자 58.7세,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장 적은 58세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세 연금유형 가입자 모두 앞으로 가입자 자신이 은퇴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3-14년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그들의 은퇴 후 대비정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직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회사원의 은퇴예상 나이가 가장 빨라서 55.6세였고, 다음으로는 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직원 57.9세로 나타났다. 교수의 경우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국립대 교수와 사학연금 가입자인 사립대학 교수 모두 은퇴 예상 나이는 동일하게 65세를 꼽고 있었다.

그런데 전체 응답자가 희망하는 은퇴나이는

Table 2. Reliability of participated public pension system N(%)

	NPS	GEPC	KTP	Total
Reliable	30(25.6)	52(43.7)	16(43.2)	98(35.9)
Unaware	15(12.8)	22(18.5)	6(16.2)	43(15.8)
Uncertain	72(61.5)	45(37.8)	15(40.5)	132(48.4)
Total	117(100.0)	119(100.0)	37(100.0)	273(100.0)
$\chi^2$ - value	$\chi^2 = 14.617^{**}$		df=4	

\*\* p<0.01

전체 평균 61.2세로 대체로 예상시기보다 약 2,3년 정도 늦추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 연금 가입자만 60세 이전에 은퇴할 것을 희망하였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는 60세 이후 은퇴를 희망하였는데, 사학연금 가입자는 예상 은퇴 나이와 희망 은퇴 나이차가 거의 없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무려 4년 정도 늦추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다시 직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사학연금 가입자인 사립대학 교수는 68세, 자영업자는 65.3세로 모두 3년 정도를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여기서 공무원 연금 가입자인 공무원은 1살을 늦춘 59.5세로 60세를 넘지 않았고, 교직원 은퇴 희망나이를 오히려 3.5세를 앞당겨서 57.5세를 은퇴 희망나리로 꼽고 있다는 점이 다소 특이하였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직원 역시 59.6세로 국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60세 이전에 은퇴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교수와 정년시기가 다른 교직원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정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덜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Table 5에서 본인의 은퇴희망시기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예상나이에 그냥 하겠다’는 응답자가 약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예상나이보다 늦게 하고 싶다’ 36.3%, 그리고 ‘예상나이보다 일찍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4.1%에 불과하여 할 수만 있다면 은퇴시기를 늦추고 싶은 바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적연금별로는 공무원 연금 가입자 중에서 예상보다 일찍 하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명예퇴직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은퇴정년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학연금 가입자들 중에서는 ‘예상 나이에 그냥 은퇴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45.4%가 은퇴시기를 늦추고 싶다는 바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회사원의 퇴직시점이 가장 빨라서 그들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은퇴

Table 4. Retirement age and remaining period till retirement M(SD)

	NPS	GEPC	KTP	Total	F test
Present age(yr.)	45.2(6.1) A	45.1(7.6) A	48.1(3.8) B	45.6(6.6)	3.227*
Expecting retirement age(yr.)	58.0(7.1) A	58.7(3.2) A	62.3(3.7) B	58.9(5.4)	9.959***
Remaining years till retirement(yr.)	12.8	13.6	14.2	13.3	
Desired retirement age(yr.)	62.1(6.7)	59.9(5.5)	62.9(5.8)	61.2(6.2)	2.276

\*\*\* p<0.001    \* p<0.05

# Alphabetical characters mean the Duncan-test results.

Table 5. Desired retirement point of time N(%)

구 분	NPS	GEPC	KTP	Total
Earlier than expecting retirement age	10(8.4)	26(20.6)	4(10.3)	40(14.1)
Later than expecting retirement age	54(45.4)	39(31.0)	10(25.6)	103(36.3)
On time	55(46.2)	61(48.4)	25(64.1)	141(49.6)
Total	119(100.0)	126(100.0)	39(100.0)	284(100.0)
$\chi^2$ value		$\chi^2 = 13.852^{**}$	df=4	

\*\* p<0.01

시점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늦게 까지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 가 생각된다. 이 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3.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제생활 실태

공적연금 가입자들의 현재 경제생활 수준은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배우자 분을 합한 가족 단위로 제시한 것이어서 Table 6에서는 배우자의 소득활동 여부를 직업이 없다, 봉급을 받는 직업, 그리고 자영업의 세 구분을 하여 알아 보았다.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직업이 없는 배우자가 약 45%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직업을 가진 배우자 가운데에는 봉급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다 더 많았다. 집단별로는 직업이 없는 배우자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봉급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배우자는 자영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는 것이었다.

공적 연금 가입자 가정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Table 7에서 정리하였다. 먼저 전체 가계의 세 공제 전 소득은 평균 441만원이고, 세 공제 후 소득은 평균 376만원으로 약 65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학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월 소득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월 생활비 지출액 역시 사학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과

Table 6. Spouse's income activity N(%)

	NPS	GEPC	KTP	Total
Nothing	53(43.1)	55(43.0)	22(56.4)	130(44.8)
Salaried	31(25.2)	51(39.8)	10(25.6)	92(31.7)
Self-employed	39(31.7)	22(17.2)	7(17.9)	68(23.4)
Total	123(100.0)	128(100.0)	39(100.0)	290(100.0)
$\chi^2$ -value	$\chi^2 = 12.333^*$		df=4	

\* p<0.05

Table 7. Present economic situation of three group members M(SD)

	NPS	GEPC	KTP	Total	F test
Pre-tax income (10thousands won)	409.9(192.0) A	426.8(180.1) A	572.6(219.0) B	441.1(197.8)	10.768***
After-tax income (10thousands won)	356.0(179.9) A	361.5(163.4) A	480.9(161.8) B	376.2(174.2)	7.118***
Monthly living expenditure (10thousands won)	221.0(109.0) A	254.5(131.1) A	330.8(119.2) B	250.2(125.2)	11.559***
Monthly distributory amount (10thousands won)	26.3(50.8)	38.1(59.8)	49.5(57.8)	35.8(56.7)	1.696
Monthly private pension saving (10thousands won)	42.9(46.1)	45.4(49.3)	38.8(30.7)	43.4(45.5)	0.204
Other savings (10thousands won)	42.5(37.5) A	66.1(63.9) AB	76.5(79.6) B	60.0(60.8)	3.459*

\*\*\* p<0.001 \* p<0.05

# Alphabetical characters mean the Duncan-test results.

공무원 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세후 소득과 생활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약 15~40여만원 정도 더 커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가계경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이들의 공적 연금 부담금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가장 많았고, 개인연금 저축액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기타 저축액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약 77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66만원,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43만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사학연금 가입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들과는 다른 저축행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은퇴 후를 대비한 재정적 준비 내역과 생활수준 평가  
 은퇴 후를 대비한 재정적 준비 내역에서는 먼

Table 8. Saving methods for the after retirement N(%)

	NPS	GEPC	KTP	Total
Only public pension(1)	14(14.7)	16(14.4)	4(11.4)	34(14.1)
(1)+private pension(2)	34(35.8)	24(21.6)	5(14.3)	63(26.1)
(1)+others(3)	11(11.6)	20(18.0)	6(17.1)	37(15.4)
(1)+(2)+(3)	36(37.9)	51(45.9)	20(57.1)	107(44.4)
Total	95(100.0)	111(100.0)	35(100.0)	241(100.0)
$\chi^2$ -value	$\chi^2 = 10.058^{ns}$		df=6	

저 은퇴 후를 위한 준비수단에 대해 알아보았다. Table 8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세 집단 모두에서 공적 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기타 저축 등의 방법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44.4%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서 공적 연금과 병행해서 개인연금에만 가입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의 질문을 통해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가입자의 순으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Table 9. Anticipating income level after retirement and aimed size of saving money for retirement N(%)

Anticipating income level	NPS	GEPC	KTP	Total
90~100% of present income	17(13.9)	24(19.5)	3(8.1)	44(15.6)
70~90% "	42(34.4)	44(35.8)	11(29.7)	97(34.4)
50~70% "	45(36.9)	51(41.5)	19(51.4)	115(40.8)
30~50% "	18(14.8)	4(3.3)	4(10.8)	26(9.2)
Total	122(100.0)	123(100.0)	37(100.0)	282(100.0)
$\chi^2$ - value	$\chi^2 = 13.444^*$		df=6	
Aimed fund size	NPS	GEPC	KTP	Total
Below 2 hundred millions	37(30.8)	26(21.5)	5(13.5)	68(24.5)
2-3 "	23(19.2)	28(23.1)	5(13.5)	56(20.1)
3-4 "	15(12.5)	20(16.5)	9(24.3)	44(15.8)
4-5 "	20(16.7)	19(15.7)	7(18.9)	46(16.5)
5-6 "	13(10.8)	5(15.7)	3(8.1)	21(7.6)
Over 6 "	12(10.0)	23(19.0)	8(21.6)	43(15.5)
Total	120(100.0)	121(100.0)	37(100.0)	278(100.0)
$\chi^2$ - value	$\chi^2 = 16.195^{ns}$		df=10	

\* p<0.05

이렇게 보면 국민 연금 가입자들은 현금 저축 말고도 별도의 부동산 마련으로 대비하고, 사학 연금 가입자는 대부분 현금 저축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부동산과 현금저축의 복합 형태를 띠는 경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중년기 직장인들은 은퇴 후에 자신들의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Table 9에서와 같이 현재소득의 50~70% 정도라는 응답율이 약 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70~90% 수준이라는 응답율이 34.4%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가장 높은 소득을 예상하고 있었고, 사학연금 가입자는 매달 불입하고 있는 공적 연금액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현재소득의 50~70% 정도라는 응답율을 보여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국민 연금 가입자 가운데에서 현재 소득의 50% 미만을 예상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입자들의 예상 소득 수준과 대체로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은퇴 후를 대비하여 목표로 하는 준비 자금 규모는 '2억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Table 10. Expecting income source after-retirement(multiple responses) N(%)

	NPS	GEPC	KTP	Total
Real estate	42(50.0)	19(32.8)	8(32.0)	69(41.3)
Dividend	14(16.7)	15(25.9)	5(20.0)	34(20.4)
Interest	34(40.5)	28(48.3)	11(44.0)	73(43.7)
Labor income	36(41.7)	16(27.6)	5(20.0)	56(33.5)
Side job	28(33.3)	22(37.9)	12(48.0)	62(37.1)
Total	84(100.0)	58(100.0)	25(100.0)	167(100.0)

다음이 '2-3억 이내' '4-5억 이내'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3억 이내가 약 50%나 해당하였고,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2-4억 이내'가 약 40%, 그리고 사학연금 가입자는 '3-5억 이내'가 약 43% 정도였다. 또한 5억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응답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0.8%,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34.7%, 그리고 사학연금 가입자의 29.7%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하여 연금 수령 외에 예상되는 소득원에 대해 응답자들로 하여금 복수응답토록 하였는데, Table 10에서와 같이 이자 소득 43.7%와 부동산 수입 4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부동산 수

Table 11. Present and after-retirement living level evaluation

	N(%)			
Present	NPS	GEPC	KTP	Total
Enough for living	23(22.8)	19(17.8)	14(36.8)	56(22.8)
Adequate for living	55(54.5)	62(57.9)	18(47.4)	135(54.9)
Insufficient for living	23(22.8)	26(24.3)	6(15.8)	55(22.4)
Total	101(100.0)	107(100.0)	38(100.0)	246(100.0)
$\chi^2$ - value		$\chi^2 = 5.985^{ns}$	df=4	
After retirement	NPS	GEPC	KTP	Total
Enough for living	25(29.1)	17(16.7)	10(30.3)	52(23.5)
Adequate for living	29(33.7)	46(45.1)	16(48.5)	91(41.2)
Insufficient for living	32(37.2)	39(38.2)	7(21.2)	78(35.3)
Total	86(100.0)	102(100.0)	33(100.0)	221(100.0)
$\chi^2$ - value		$\chi^2 = 7.971^*$	df=4	

\* p<0.05

입, (부수적인)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는 이자소득과 부업소득을 많이 꼽고 있었다. 그러나 본 질문에서는 무응답자가 많아 이것만으로 자세한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는 앞의 Table 7과 같은 가계 경제적 상황에 대해 Table 11에서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평가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생활하기에는 문제없다’는 응답비율이 약 55%였고, ‘충분히 저축까지 한다’와 ‘생활비로도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각각 22.8%와 22.4%였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사학 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평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은퇴 후 생활수준에 대해 우려하는 응답율이 현재 생활수준 평가 비율보다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자가 국민 연금 가입자에게서 많다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인정되는 것이다.

**5. 은퇴 후를 대비한 목표준비 자금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은퇴 후를 대비한 목표 준비 자금규모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먼저 문헌고찰에서 노후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월 소득과 나이,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수들, 즉 현재의 본인의 나이, 은퇴 예상 나이, 은퇴예상 나이까지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세전 소득, 세후 소득, 월 지출생활비, 은퇴 후 예상생활기간, 현재 부양 가족수, 은퇴 시 예상부양 가족수, 현재 생활수준, 은퇴 후 예측 생활수준, 그리고 은퇴

후 예상소득수준 변수 등 12개 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공선성 체크방법으로 분산 팽창계수(VIF)와 이의 역수인 공차한계(Tolerance Limit)를 이용하였는데,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후소득 변수를 제외한 11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목표준비 자금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Enter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2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보면 은퇴 후를 대비한 목표자금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기간’이었는데, 모든 집단에서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기간이 길수록 목표로 하는 자금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경우에는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기간이 길수록, 현재 나이가 젊을수록, 현재 생활비지출액이 클수록, 현재의 생활수준을 낮게 평가할수록, 그리고 은퇴 후 예상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를 대비한 목표 준비자금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서는 세전 소득이 적을수록, 현재의 생활비 지출이 클수록, 현재의 생활수준을 낮게 평가할수록, 그리고 은퇴 시까지 공적자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길수록 목표준비 자금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가입자의 경우에는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기간 외에 오직 은퇴 후 예상되는 부양가족수가 적을수록 목표준비 자금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는 오직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기간 만이 목표준비 자금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향변수들은 각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의 설명력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경우가 가장 높은 61%였고, 다음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53.8%였다. 그리고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38.1%로, 본 분석에 사용한 변수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6. 노후 준비에 임하는 태도

공적 연금가입자들의 노후 준비에 임하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인숙(1992)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하여 '적극 찬성'을 5점으로 하고 '적극 반대'를 1점으로 하는 총 20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으로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커뮤날리티가 0.5이하로 나타난 3개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식으로 하여 누적 분산이 가장 크게 나오도록 문항 삭제 과정을 반복한 결과, 최종적으로 Table 13에서와 같이 아이겐 값이 1.0 이상인 5개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 5개 요인이 노후 준비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63%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각각의 요인에 대해 재무계획 실천성, 경제관심성, 자녀 의존성, 재산 유지, 그리고 노후에의 불안성이라고 명명해 보았다.

이들 요인에 대해서 각 집단별로 비교해 본

결과, Table 14에서와 같이 재무계획 실천성에서만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재무관리를 잘하고,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실천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가입한 공적연금에 상관없이 은퇴를 준비하는 중년 직업 종사자들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야 하려는 의식은 매우 저조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으며, 그러한 한편으로는 경제적 능력 및 재산보유에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가올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비교적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요인으로 묶인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았는데, 특히 '가계부나 지출

Table 12. Variables influenced to the aimed size of saving money for after retirement

	NPS		GEPC		KTP		Total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Present age	.187	1.326	-.227	-1.878	.109	.497	-.164	-2.118*
Expecting retirement age	-.401	-1.924	-.065	-.514	-.017	-.071	.006	.064
Before-tax income	-.297	-2.103*	-.062	-.346	-.062	-.346	-.028	-.258
Living Expenses	.453	3.329**	.233	1.263	.292	1.066	.322	2.953**
Expecting living period after retirement	.452	3.415**	.430	4.008***	.526	2.637*	.444	6.085***
No. of present dependents	-.077	-.602	.178	1.609	.064	.413	.067	.907
No. of dependents after retirement	.146	.990	-.231	-2.160*	-.129	-.724	-.139	-1.877
Present living level	-.336	-3.098**	-.082	-.778	-.228	-.855	-.186	-2.541*
Anticipating living level after retirement	-.361	-3.180**	.036	.348	.028	.112	-.103	-1.451
Anticipating income after retirement	.147	1.061	.053	.513	.401	2.057	.218	3.063**
Expecting public pension participation period till retirement	.713	3.877***	-.207	-1.825	-.205	-.787	-.010	-.112
F - value	5.667***		3.839*		4.803***		9.483***	
adjusted R <sup>2</sup>	.538		.610		.381		.411	

\*\*\* p<0.001    \*\* p<0.01    \* p<0.05



기록장을 기록하면서 지출행동을 반성하고 있다'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만이 중간점을 넘은 3.3점이었고,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생활 욕구를 절제하면서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익히고 있다'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3.5점으로 가장 높고, 공무원 연금 3.2점, 사학 연금 3.1점으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중년기 직업종사자들이 자신의 은퇴 후의 생활을 어떻게

Table 13. Factor analysis related to the attitude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h <sup>2</sup>
8) I plan how to spend money for a year.	.687					.561
9) I reexamine my own expending behavior by recording a domestic account book.	.691					.531
10) I try to save money beyond my ability for the old age.	.769					.644
11) I practise to moderate unreasonable living desire and to try thrift and saving life.	.735					.586
12) I am interested in tax usage.		.767				.722
13) I am interested in the news related economic situation		.875				.781
20) I expect to help children after retirement by doing household or by caring my grandchild.			.691			.563
1) I think that well-educated child will ensure the stable old age.			.646			.537
14) It is possible for me to rely upon my children when I am confronted with hard time after retirement.			.734			.549
16) I will keep the retirement fund by all means even though my children faces hard time.				.803		.696
17) It is necessary for me to keep property in order to be treated preciously from my children.				.802		.681
15) It will be economically difficult after retirement even though I prepare advancely before retirement.					.769	.719
18) I guess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me to maintain as same living level as present after retirement.					.752	.640
Eigen Value	2.316	1.511	1.510	1.481	1.390	
% of variance	17.81	11.63	11.61	11.39	10.69	
Cumulative %	17.81	29.44	41.05	52.44	63.14	
Factor name by the researcher	Financial planning and practice	Economic interest	Dependence on children	Property maintenance	Anxiety for the old age	

# Numbers mean the question numbers in the questionnaire.

예상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 유형별로 비교해 보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에 대해 믿을 만하다는 응답보다는 불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집단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리고 가입한 공적연금을 신뢰하는 집단에서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연금제도에의 믿음은 생활만족도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적연금 가입자 본인이 예상하는 은퇴 나이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다른 연금유형에 비해서 약 4세 정도 높았고, 예상 은퇴시기보다 더 늦게 은퇴하기를 원하는 응답율은 국민 연금 가입자에게서 더 높았다.

셋째, 연금 가입자 본인이 단독 소득원인 경우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다른 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많았지만, 전반적인 경제생활 실태는 소득과 지출, 그리고 저축의 규모가 세 집단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는 각 집단 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으며, 예상되는 소득 수준에 대한 기대는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다른 연금제도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학연금 가입자가 낮았다. 또한 목표준비 자금규모는 각 집단별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는데, 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는 세 집단 모두에서 은퇴 후 예상하는 생활기간이 길수록 목

표 자금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세전 소득이 적고, 현재의 생활비 지출이 클수록, 현재의 생활수준을 낮게 평가할수록, 은퇴 시까지 공적자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길수록 목표준비 자금규모가 크고,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기간 외에 은퇴 후 예상되는 부양가족수가 적을수록 목표준비 자금규모가 커지고, 사학연금 가입자는 오직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기간 만이 목표준비 자금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가장 긍정적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가입자에서 생활비로도 부족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여섯째, 공적 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준비에 임하는 태도는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5개 요인, 즉 재무계획 실천성, 경제관심성, 자녀의존성, 재산유지성, 그리고 노후불안성 모두에서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재무계획 실천성을 제외한 4개 요인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재무계획 실천성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낮았는데, 특히 자신의 지출행동에 대한 반성문항과 노후 생활을 대비한 근검절약 생활 연습문항에서 뒤떨어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Table 14. Comparison on attitude scores for the old age M(SD)

	NPS	GEPC	KTP	Total	F test
Financial planning and practice(20points)	12.7(2.5) A	12.1(2.7) AB	11.5(2.8) B	12.3(2.7)	3.705**
Economic interest(10)	7.2(1.3)	7.0(1.3)	7.0(1.6)	7.1(1.3)	0.814
Dependence on children(15)	9.2(2.1)	8.8(2.2)	9.0(2.1)	9.0(2.1)	0.630
Property maintenance(10)	7.0(1.2)	7.1(1.7)	7.2(1.4)	7.1(1.4)	0.126
Anxiety for the old age(10)	6.3(1.2)	6.3(1.4)	6.1(1.3)	6.3(1.3)	0.532

\*\* p<0.05

# Alphabetical characters mean the Duncan-test results.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돌입하였으므로, 이미 경제활동에서 물러나 노인층에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한 복지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들은 노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 종사하고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은퇴를 맞이하게 될 공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에 대한 견해, 현재 경제생활 상태,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태도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은퇴를 대비해야 하는 중년기들은 자신의 은퇴 후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름대로 은퇴 후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만약 자신들의 준비가 부족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전 세대들이 그러한 것처럼 자녀에게 의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집단구분 변수로 사용한 가입 공적연금 유형별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집단별로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에의 가입자들은 현재 및 은퇴 후의 경제적 생활에 대해 비교적 낙관하는 편이지만, 은퇴 후에 대한 준비와 노후 대비 태도는 그다지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연금 제도 자체에 가장 불안해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재무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본인이 단독소득원인 경우가 많으면서 현재의 경제생활 규모는 다른 집단에 비해 크고, 가장 유동성이 강한 현금 성격의 저축을 주로 하면서 목표준비자금 규모 결정에도 다른 연금 가입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은퇴 후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도 가장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용면에서 그들의 은퇴 후의 생활대비와 노후준비 태도가 과연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더구나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직업은 사회변

화에 따른 영향에 가장 둔감한 교수 및 교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재무관리 능력수준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재무관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은퇴 후 예상소득원도 세 집단 중 가장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은퇴 후를 위하여 자신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자에 비해 직업의 성격상 덜 안정적이고, 은퇴를 빨리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려는 태도가 비교적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가입자들은 두 연금유형의 중간적 성격을 띠면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미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되어 있는 노인층에 대한 비노년층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중년층마저 여전히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채 새롭게 노인층에 돌입함으로써 비노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 교육적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체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적 제약과 소득활동 그 자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노후를 대비한 준비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노인복지 정책은 있어도 중년층 복지정책은 부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년층 직장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장 과 국가 및 지역사회에게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재무관리 및 노후 준비요령을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중년층에게는 노후 준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적 연금 가입자 집단별로 공무원과 대학 교수 및 교직원, 교사들은

직장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집단별 차이에 입각하여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안내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 연금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연금 제도 운영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가 중년기 직장인이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 유형별로 가입자들의 특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으나, 각 연금 유형별 가입자의 직업이 매우 한정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별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파악할 수 없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30·40·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 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김기태(2003) 장년층 노후준비 태도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자·박미금·송말희(2005) 남성퇴직자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2), 143-158.  
 김미경(1992)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혜(1993a) 퇴직에 대한 태도와 개념화에 기초한 퇴직준비교육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2, 13-37.  
 김미혜(1993b)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 교육 모형의 개발. 한국노년학 13(2), 15-29.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 연구 3(2), 45-57.  
 김순미·양정선(1994)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2(5), 45-54.  
 김연옥(1992) 퇴직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퇴직예정자의 욕구조사. 한국사회복지학 20, 81-100.  
 김인숙(1992)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 수준에 관한 연구-경기도 중년기 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가족 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복지 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매일경제(2006.6.26; 2006.6.28) 사설.  
 매일경제(2006.7.7) 공직사회 속 탄다.  
 매일경제(2006.7.13) 은퇴 후 흠에 살리다.  
 박미석(2005)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노후생활준비와 노인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16.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배준호·김상호(2005), 연금, 이렇게 바꾸자,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서병우(2001) 중년층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과 노후준비활동에 관한 연구-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성미애·옥선화(2002)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수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40(1), 1-22.  
 손선경·임정빈(1985) 노후생활 대책에 대한 성년층의 의식연구-서울과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07-125.  
 심영·김대년·조명희·조영희(1996)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19.  
 양세정·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양순미·홍숙자(200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41-149.  
 엄규숙(2003) 국민연금, 개인연금보다 낫다. 노동사회 2003년 10월호. 30-33.  
 연합뉴스(2006.5.31.) 60-80세, 매달 200만원 쓰려면.  
 오종운(2005.3.19) 40대가 당장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가옥·이지영(2005)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93-120.  
 이승아·한경혜(1978)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6(5), 125-135.  
 이인수(2002), 노인복지론, 서울:양서원.  
 이희경(2003) 중년층 직장인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대전광역시 사무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희숙(1995) 일하는 기간 동안의 가계조축 행태와 가계소비행태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6(1), 41-55.  
 장민자(2003) 청장년층의 노후생활 대책에 대한 의식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순희·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 노인 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13-122.

- KBS(2004.10.26.) 뉴스보도.
- 최가영·조임현·이의훈(2001) 노년기 근로자의 퇴직현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73-92.
- 최보아·지영숙(2004)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47-61.
- 최성재·차홍봉·김익기·서혜경(2000)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0(3), 143-167.
- 최혜지·이영분(2005)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415-435. 표준국어 대사전. 인터넷판.
-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홍성희·김순미·김혜연(2006) 남성 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 프로그램-생활문제 인식 및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95-21.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co.or.kr](http://www.gepco.or.kr))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http://www.nps4u.or.kr)),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http://www.ktpf.or.kr))
- 안티 국민연금 사이트([www.antinpc.com](http://www.antinpc.com), [antinpc.liso.net](http://antinpc.liso.net))
- Canada(2001) Canada's Retirement Income System.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Canada(연도미상) Retirement Questionnaire.
- Jennifer AG(2002) The Handbook of Canadian Pension and Benefit Plans. CCH.
- Rosalie C(2001) Social Welfare in Canadian Society. Nelson.